

민주, 연대 집회에서 '단독 집회'로 급선회

시민단체 결합 경우 '정권 퇴진' 주장 분출 부담 "김건희 특검법 관철 위한 서명 운동도 벌일 것" 일부 '탄핵 의원연대'·'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당 단독 집회로 급선회했다.

시민단체와 결합할 경우 정권 퇴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9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주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결합할 경우 탄핵 얘기가 터져 나오는데 민주당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전인 5일 민주당은 시민단체와의 주말 연대 집회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단체와 연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하나, 둘 발을 들여



윤 대통령 발언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특검 수용 촉구 발언을 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자료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놓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1

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변명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용암처럼 분출하는 국민 분노에 권력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알고 보

니 대통령 당선 때부터, 경선 때부터 무효였다"며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식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에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에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비롯해 민주당 25명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 의원 40명이 참여한 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도 최근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임기 단축 개헌은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며 "국민투표에 부지면 법 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 등은 2개 조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尹대통령 오늘 회견...집권 후반기 운명 갈림길

韓, 인적쇄신·김여사 활동 중단 등 요구...尹메시지 수위 관심 野 '김여사 특검법' 공세 강화 전망...與 이탈표에도 영향 줄 듯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가 깊어지고 조진권 의원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민심의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되리란 기대감과 함께 자칫 더 큰 위기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6일 이번 메시지에 대통령실 및 내각 인적쇄신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전면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전향적인 쇄신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의 경우 인적쇄신이나 김 여사 문제 등은 윤 대통령이 결단할 영역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 쇄신의 필요성에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서는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씨 통화 공개,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위적 인적쇄신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있고, 김 여사의 활동도 외교·외전 등 관련 분야에서는 중단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친한계의 요구와는 괴리가 있는 지점이다. 만약,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 대표가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형성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장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친한계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에 따라 반대 명분이 약해져 야당의 공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4일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4표가 나왔는데 여권 내용이 심화할 경우 다음번 재표결에서는 통과 요건인 이탈표 8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지역신문 육성 발전 도움되도록 제·개정돼야"

대신협 4차 사장단회의, 22대 국회 개헌 후 미디어 관련법 다수 발의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의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22대 국회 개헌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헌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대신협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성과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 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기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또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대신협공동취재단>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